지방채 이자부담에 '벼랑 끝' 교육재정

올 광주 975억·전남 3636억 발행…내년 이자만 74억·215억 누리예산 부담까지 가중…화장실·냉난방 등 시설투자 엄두 못내

광주·전남 교육청의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누 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교 실과 화장실 보수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부담도 커지는 형편

국회 교육문화제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경우 올 해만 9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전남도 지방채 발행으로 3636억원의비은 전다

광주시교육청이 지금껏 발행한 지방채

만 228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 상환해야 할 이자만 74억원이다. 전남도 내년에 부담해 야할 지방채 이자가 215억원이나 된다.

광주가 지난 2012년 누리과정에 쏟아 부은 예산이 390억 원, 2013년 899억 원, 지난해 1179억 원에 이르는 등 급증한 것 도지방채 발행에 한 몫을 했다.

올해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비(2059억원)의 67.8% 수준인 1397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없는 살림에 노후 화장실을 보수 하고 찜질방같은 교실의 냉방 시스템을 고치려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 행해 재정을 꾸려왔다는 게 유 의원 분석

■ 지방교육세 발행 및 상환 현황

구분	2015년(단위:억원)				2016년(단위:억원)			
	발행	원금상환	이자상환	채무잔액	발행	원금상환	이자상환	채무잔액
서울	8,151	_	128	11,883	_	437	397	11,446
부산	3,685	-	49	5,220	-	_	170	5,220
대구	3,951	-	52	5,649	-	116	182	5,533
인천	2,587	73	78	4,904	-	124	161	4,780
광주	975	-	42	2,281	-	33	74	2,249
전남	3,636	_	110	6,938	-	134	215	6,803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이다. 이마저도 미흡해 교육환경개선사 업비 반영률이 광주는 49%에 그쳤다고 유의원은지적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매긴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이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 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다.

화장실을 비롯해 냉난방, 전기시설, 소

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방수공사, 창호 교체, 도장공사 등이 주된 사업으로, 광주는 필요한 예산의 51%, 전남은 25%가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재정 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 기지 말고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돌고래호 12번째 시신 수습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사고 열흘째인 14일 12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해군 함정 고속단정이 하추자도 남동쪽 5km 해상을 수색하던 중돌고래호탑승자 장모(53·부산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일 오후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자, 지난 10일 오후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11번째 사망자 시신을 수습한 지 나흘 만이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이 제주에 와 있는 점 등을 고려, 시신을 헬기로 제주한라병원에 이송한 뒤 신원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허위 계산서로 억대 탈세 순천 40대 고철업자 구속

순천경찰은 14일 고철 수집업체를 운영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가로 챈 A(43)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부터 3개월간 광양시에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16억4000여만원의 세금계산 서를 허위로 발행해 부가세 10%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고 철 등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가세를 챙기고, 영수증 을 발행한 고물업체는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해 탈세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서부 농산물 시장 "바쁘다 바빠" 수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동에 사과와 배 등 제수용 과일들이 상자째 수북히 쌓여 있다. 농산물시장측은 과일값 하락으로 올해 추석에는 제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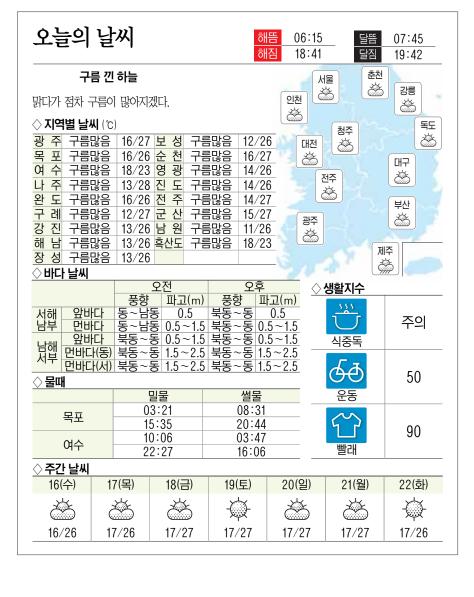
"화재참사 요양병원 '자매병원' 요양급여 100억 환수 부당"

광주지법 "병원 개설 증거 없다"

지난해 화재참사로 2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자매병원에 내려진 100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4일 H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H재단에 한 101 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도 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씨 가 형식적으로 H재단을 설립해 산하 병원 을 개설·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재단을 이씨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은 H재단 소속 요양병원도 이씨가편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라며 병원개설부터 당시까지 지급된 의료비 전액을환수하도록 같은 해 9월4일 건보공단에통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나이롱 환자' 8년 8억원 챙겨 자녀 동원 보험사기 부부 적발

8년에 걸쳐 허위입원을 일삼으며 무려 8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부는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도 보험 사기 행각에 동원하는 등 자녀마저도 돈 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A(63)씨와 B(여·44)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무려 38건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했다. 아픈 것과는 관계 없이 환자인 척 연기만 잘 하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고액의 입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허위로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었다.

보임 등 다내녀는 독적이었다. 부부는 2년간 꼬박꼬박 매월 150만원 에 달하는 보험금을 납부한 뒤 지난 2005년 5월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 광주지역에서 입원환자 관리가 허 술한 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입원한 뒤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는 이른바 '나 이롱 환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병원 측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 부부는 즉시 병원을 옮기는 수법을 썼다. 같은 병으로 너무 자주 입원한다는 생각이 들때면 병명을 바꾸기도했다.

xx다. 남편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유 공자로 지정받았지만, 보훈병원을 이용 하지 않았다.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등 병원비 대부분이 지원대상임에도,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8년여간 일반 병원만 돌며 허위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이다.

부부 사기단은 초·중·고에 다니는 3명의 자녀까지 보험사기 행각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병원 진료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부부 사기단이 이런 수법으로 8년간 허위로 타낸 보험금만 무려 8억3500만 원에 달했다.

월 평균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것이다. 부부는 이 돈을 가족 생활비에 쓰거나 남편 B씨가 운영하는 무안군 소재 산장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21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 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도 움을 준 병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새 정 치 민 주 담양·장성·영광·함평지구당 군 청 영 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양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광 지사장 최 영광종합병원 영광노인요양병원 이사장 조 병원장 오 영 광 기 독 병 원 신 하 병 원 경 이사장 김 병원장 이 만

※ 축제행사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 합니다.